

국가·도시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움직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2018.1.18.

부산시 정보화담당관실
2018.1.5.

광주시
2018.1.10.



공공빅데이터센터 업무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2018),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
1월 18일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진행

행정안전부가 공공·민간 부문의 빅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함께 센터가 신속히 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먼저 정부통합데이터 분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국민 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 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와 각종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정과제·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 기능 또한 수행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성하여 협업을 유도하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데이터를 생성·제공하게 된다.

부산시,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개시

부산시는 데이터 중심의 시정 구현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개방형 빅데이터 포털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부산시가 수집한 의료와 신용·부채 등의 개방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신용카드 사용 등의 자료를 도표·차트 등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방된 자료나 시민이 보유한 자료를 분석하여 업무나 연구자료 등 원하는 목적으로 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셀프분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빅데이터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추진

광주시가 빅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5개년(2019~2023)에 걸쳐 수행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국내외 정책동향 및 선진사례 분석 ▲광주시 빅데이터 환경분석 및 서비스 실태조사 ▲광주형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추진전략 마련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과 제 및 정책모형 개발 ▲광주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략계획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이행 방안, 재원 구성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